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압곡동 300-4 2008년 2월 12일

제08-05호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과제

오 용 협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위원 (yho@kiep.go.kr, Tel: 3460-1022)

김연실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원 (ykim@kiep.go.kr, Tel: 3460-1187)

주요 내용

- ▣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은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 12월 마련된 이후 4년이 경과하였으며, 금년은 동북아 금융허브 3단계 추진 로드맵 중 2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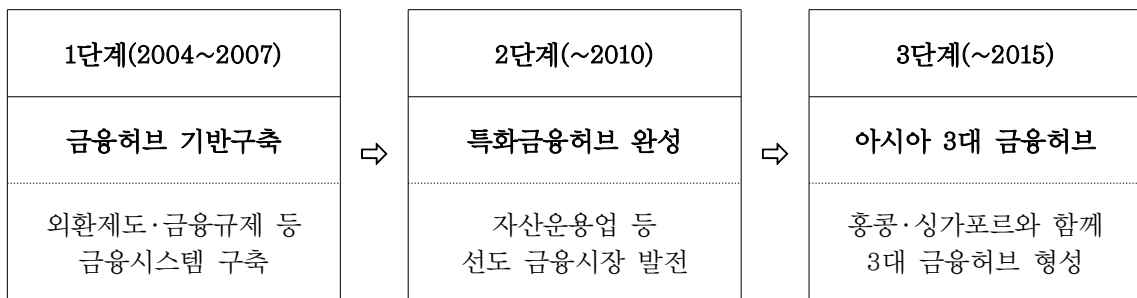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관심으로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금융허브 추진속도가 경쟁국에 비해 느리고, 금융허브 기반확충을 완성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많이 있음.
 - 최근 본 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상해, 북경의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된 국제화 및 성장 잠재력 부문에서 상해가 서울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 노력과 함께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금융회사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금융산업의 성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 금융허브 육성을 정부 주도로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을 존중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의 Down-to-top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신상품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시장을 통한 위험 관리 능력을 확대하고, 주식선물시장에 인덱스펀드의 추가적 상장과 헤지펀드의 추가 허용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형 투자회사 육성과 금융기관 국제화를 통해 세계적인 금융플레이어를 만들어내고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 특히 금융허브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나 투자유치 등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나, 생활환경 및 클러스터 조성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

1. 서론

- 2008년은 동북아 금융허브 3단계 추진 로드맵 중 2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으로, 2007년을 목표로 추진한 1단계 금융허브 기반구축이 완성되어야 하는 연도임.
-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이 마련(2003년 12월)된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은 주로 금융허브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경쟁국에 비해 추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동북아 금융허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단계 특화 금융허브 추진을 가속화할 것과 보다 적극적인 금융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

그림 1. 동북아 금융허브 3단계 추진 로드맵



주: 금융허브 추진과제는 국제금융 여건의 빠른 변화를 감안하여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기존 로드맵의 일정을 단축한 바 있음; 2단계를 2012년→2010년으로, 3단계는 2020년→2015년으로 단축함.

-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재검토·평가하고, 경쟁도시와의 경쟁력 비교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국내 금융허브 전략의 추진 경과

-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은 △금융시장의 선진화 △금융회사의 국제화 △금융거래의 국제화를 3대 추진목표로 설정하여 △금융 인프라 개선 △선도 금융시장 발전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우선 국내 금융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자유화와 금융규제 개혁등을 통한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허브 기반을 마련하고, 역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자산운용업 육성을 통해 특화 금융허브를 구현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여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음.

표 1.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추진과제 및 추진내용

7대 과제	추진 내용	세부 조치
자산운용업 육성	•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 투신사 구조조정 마무리 • 전문 자산운용회사 설립허용 및 최소 자본금 요건 완화
	• 자산운용시장 발전 기반 확충	•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 퇴직연금제 시행(2005.12)
금융시장 선진화	•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 6개 금융투자업 ¹⁾ 경영 등 업무영역 확대 •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채택
	• 채권시장 발전	•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 및 물가연동국채 도입 • 국채 20년물 발행 등 국채시장 활성화 • 외국기업의 국내채권 발행
	• 외환자유화(2009년 조기완료)	• 외환자유화 추진계획의 시행과 자본거래의 신고제 전환(2006.1) -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
지역특화 금융개발	• 국책은행을 통한 개발금융 참여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내 금융회사 간 협의체 구성, 개발금융 참여 인프라 구축
	• 선박투자 활성화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선박금융 지원확대 • 2004.2월 이후 49개 선박투자회사 설립: 29억 달러 조성
Global Network 강화	• 외국 금융회사 유치	• 2004년 이후 총 12개 외국금융사 국내 진출 • 금융허브지원팀: 금융회사 상시대화채널구축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 외환 등 해외진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해소: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여건 개선
한국투자공사 설립	• 한국투자공사 KIC 출범(2005.7.1)	• 외환보유액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효율적 운용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 금융규제 개혁	• 모든 금융규제를 DB화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
	• 금융감독행정 혁신	•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 및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elationship Manager) 도입
경영·생활 환경 개선	• 외국인학교 설립	•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 이행
	• 금융허브 조성 기반 구축	• 금융전문대학원, 금융허브지원팀,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 등 출범

주: 1)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업.

자료: 재정경제부.

- 7대 과제 항목별로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개혁을 추진한 결과, 금융허브 기반구축단계를 일정부분 완성하였음.

- 2007년 6월 현재 자산운용 수탁고는 271조 원에 달해 2003년(125조 원)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퇴직연금제 시행으로 2007년 5월 현재 자산운용시장으로 유입된 퇴직연금은 1조 1,371억 원을 상회함.
- 2009년에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가 전면 채택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자율경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외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사항이 있었으나, 이를 신고제로 전환(2006년 1월)함에 따라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으며, OECD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한국의 자본거래 자유화비율(자유화항목수/전체항목수)은 90%로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함(회원국 중 11위).
- 외환보유고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7월 1일 출범한 한국투자공사(KIC)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만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함.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2007년 7월 현재까지 2단계에 걸쳐 총 15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 중 52건을 개선하는 등 금융규제개혁 체제를 구축함.¹⁾
- 2007년 10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동 로드맵은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규정’ 중심의 감독을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임.
 - ※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5대 정책방향: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창의성 확대 △금융소비자·투자자 권익보호 강화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위상 재정립임.
- 2007년 11월 29일 제3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2009년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금융투자업 간 대형화·겸업화를 유도해 선진 투자은행과 경쟁할 투자은행을 육성하고자 「동북아 금융허브 실천계획 후속조치」를 주제로 4대 전략과제와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음.
- 동 4대 전략과제는 △자산운용업 육성 △금융회사 해외진출 △금융산업 인프라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기존 7대 과제를 심화·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이 추가된 △금융회사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앞서 은행과 보험업에 불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자율경쟁시스템을 완비하고자 하였음.

1) 재정경제부(2007).

표 2. 동북아 금융허브 실천계획 4대 전략과제 및 후속조치 과제

4대 과제	실천 계획	후속조치
금융회사 역량강화	• 은행지배구조 개선	• 집행간부의 자격요건 강화 •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 제고 • 지배구조 구축·운영에 관한 공시 강화: 향후 「은행경영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08년 상반기 은행법 개정안에 반영
	• 보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상품심사체계 전면 개편·상품개발 절차 간소화 • 파생상품 거래한도 내 투자를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변환 •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도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변환 및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절차 추진 •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불완전 판매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방카슈랑스 관련사항은 4단계 시행시점인 '08.4 이전까지 추진완료
자산운용업 육성	• 자산운용업 활성화	• 자산운용업 신규진입 규제완화 • 펀드 및 판매회사간 경쟁 촉진 •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 헤지펀드도입 로드맵 마련	• 「헤지펀드 로드맵」 마련 (1단계) 적격투자자 헤지펀드 도입: 자통법 시행 후 09년 말까지 추진 (2단계) 헤지펀드 투자자 범위 확대 (3단계) 현행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헤지펀드와 통합·일원화
금융회사 해외진출	• 한국투자공사(KIC) 활성화	• 투자대상국가·주식투자비중·개별주식투자 한도 등 자율성 확대: 외평기금 위탁자산에 대한 자율성확대(계약갱신시 반영) • 국내외 우수전문인력 영입위해 채용시 예산의 유연성 부여 • 인센티브 중심의 보수체계 강화하여 운용성과 제고 • 직접투자 비중 조기 확대 추진 • 위탁자산 규모 확대: 공공기금 등으로부터의 위탁('08 하반기 이후)
인프라개선 · 전문인력 양성	• 증권선물거래소(KRX) 상장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거래소수수료에 대한 정부승인·자율규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경영안정성 및 지배구조 보완장치 마련 등 개정 • 법 개정 외 공모방식 결정·예탁결제원 지분정리·자본시장 발전재단 설립 등 조치도 상장 전 마무리
	• 금융클러스터 지정방안검토	• 「금융클러스터 T/F」를 통해 클러스터 지정방안을 마련
	• 금융전문인력 양성	•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금융인력양성 역량지표 마련 • 금융자격증 제도 개선 • 금융교육과정 인증제 도입과 인센티브 제공 • 유기적·효과적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저소득층 금융교육 확대를 위해 소득연계장학금 도입 • 해외 금융인력 유치 및 국내 금융인력 유치방안 모색
	• 금융법령 영문화 추진	• 금융법령(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영문화 지속적 추진

자료: 재정경제부.

- 금융허브 추진 1단계 과정에서 양적,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동북아금융허브의 위상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과 같이 개선이 필요한 많은 제도와 법령이 발굴되고 완화 또는 폐지 예정이나, 아직 현실화되지 못함.
- 국내 금융업계의 세계적인 플레이어 부재는 우리나라의 해외포트폴리오 투자가 전체 포트폴리오 투자의 40%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위한 금융서비스의 상당부분을 해외 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함. 또한 한·미 FTA, 한·EU FTA로 인해 선진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국내시장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도 국제화와 대형화는 중요함.
- 전문인력의 부족과 영어 구사가 가능한 지원인력의 양성도 아직 답보상태에 있음. 금융전문인력 확보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나, 2006년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 개소, 금융전문대학원 개원 등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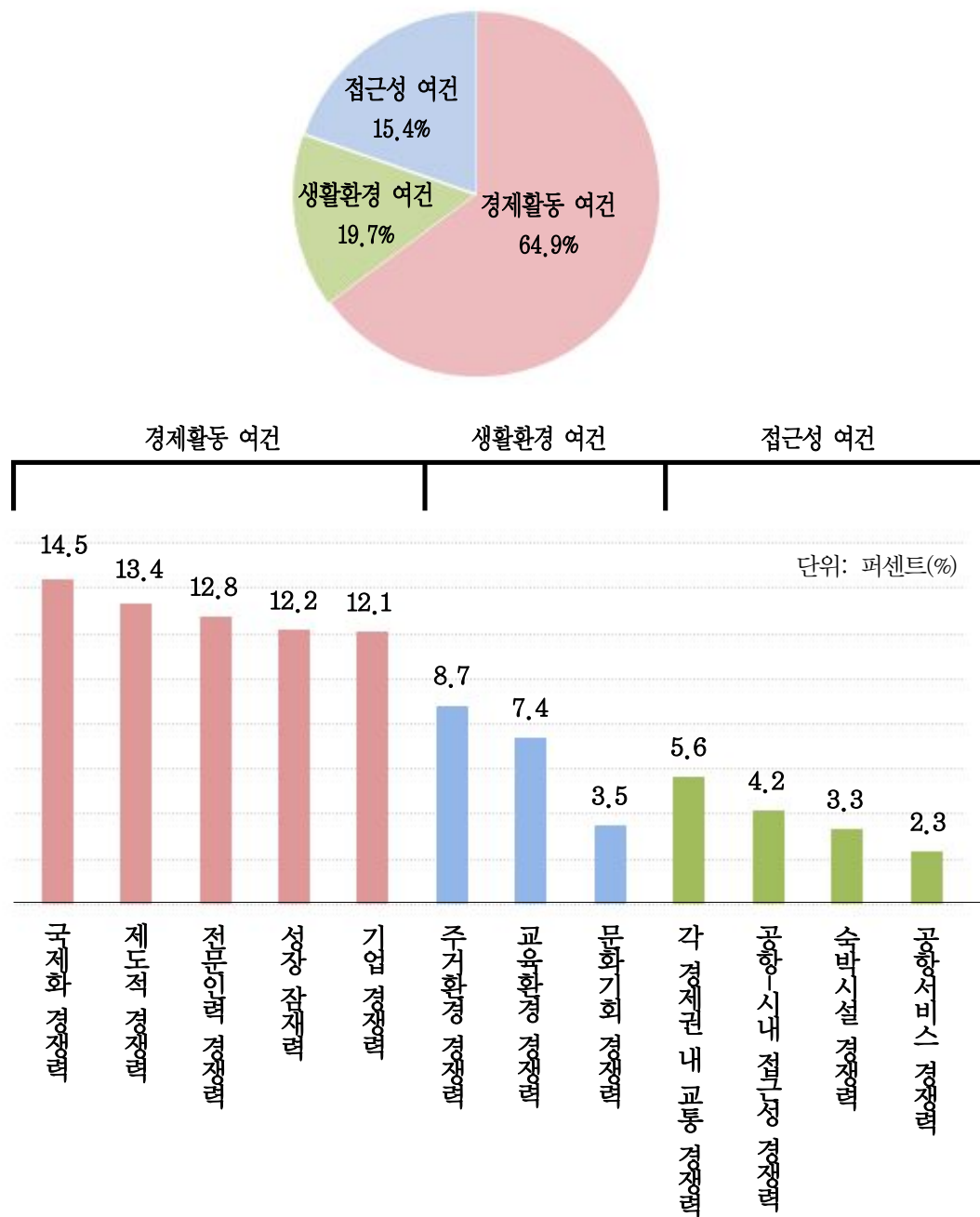
3. 동북아 금융허브 경쟁력 분석: 한국 vs. 중국

- 한국의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경쟁 상대는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 금융센터나 동경과 같은 국내 시장에 기초를 두고 있는 금융허브라기보다는 후발 금융센터로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중국의 상해와 북경이라 할 수 있음.
-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센터인 홍콩과 싱가포르는 현 시점에서 아직은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 대상임.
- 일본은 동경이 국제금융허브를 지향한다고 하나 일본 경제의 성격상 개방도가 낮고 대규모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기관이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의 입장과는 차별됨.
- 한·중 FTA 체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중 금융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나 상호보완성을 미리 파악하는 의의가 있음.

1) 경쟁력 평가 우선순위

- 본원이 국내 금융기관 중간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여건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생활환경 여건, 접근성 여건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항목별 중요도



주: 국내 금융관련 회사, 학계, 연구원 등 132명의 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7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 3주 동안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임. 총 73.48%의 회수율을 보임.

- 경제활동 여건 내 세부 항목 중에서는 △국제화 경쟁력 △제도적 경쟁력이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며 △전문인력 경쟁력 △성장 잠재력 △기업 경쟁력 또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드러남.
- 생활환경 여건은 3.3%의 근소한 차이로 접근성 여건보다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는데, 특히 △주거환경 경쟁력 △교육환경 경쟁력 확충이 중요하다는 의견임.
- 이는 높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제금융전문가 확보를 위해서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남.
- 접근성 여건은 세 평가기준 중 가장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본과 정보의 흐름이 금융서비스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특성 때문에, 교통인프라 확충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2) 서울·상해·북경의 금융허브 경쟁력 비교

- 서울은 모든 분야에서 북경보다 우수한 국제금융허브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경제활동 여건의 몇 개 항목에서 상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우선순위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국제화와 성장 잠재력 부문에서 상해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국의 금융허브 추진 1단계(~07년)의 미흡한 점으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항목으로, 한국은 국제화 경쟁력 제고에 보다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장잠재력 항목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발전단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속도와 성장잠재력을 뛰어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보다 특화된 고급 금융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 서울·상해·북경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종합

(단위: %)

평가기준	평가속성	순 위		
		1위	2위	3위
경제활동 여건	국제화 경쟁력 (14.5)	상해	서울	북경
	제도적 경쟁력 (13.4)	서울	상해	북경
	전문인력 경쟁력 (12.8)	서울	상해	북경
	성장 잠재력 (12.2)	상해	서울	북경
	기업 경쟁력 (12.1)	서울	상해	북경
생활환경 여건	주거환경 경쟁력 (8.7)	서울	상해	북경
	교육환경 경쟁력 (7.4)	서울	상해	북경
	문화기회 경쟁력 (3.5)	서울	상해	북경
접근성 여건	각 경제권 내 교통 경쟁력 (5.6)	서울	상해	북경
	공항-시내 접근성 경쟁력 (4.2)	서울	상해	북경
	숙박시설 경쟁력 (3.3)	서울	상해	북경
	공항서비스 경쟁력 (2.3)	서울	상해	북경

주: 괄호안은 상대적 중요도.

- 서울은 상해와 북경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환경과 접근성 면에서는 대체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금융허브 추진에 있어서 제도개선·규제완화와 전문인력 확충은 항상 등장하는 요구사항이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쟁도시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10년까지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의 2단계를 마무리하고 이후 3단계에서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를 형성'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제도와 전문인력 수준을 홍콩·싱가포르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려야 함.

4. 정책적 시사점

- 국제화 경쟁력은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화 수준 △기업운영 관련제도의 국제화 수준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문제 △영어사용의 용이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서울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 항목에 집중 지원해야 함.

-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의 Down-to-top 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함.
- 금융허브 추진 1단계에서 가장 미흡했다고 지적되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세계적인 금융기업을 육성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금융허브 추진을 위해 설립한 한국투자공사(KIC)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활동영역을 동아시아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역내 금융시장의 영향력 확보를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간 금융기관들이 국제경쟁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대형화가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 해외금융기관을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함.
-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역차별이 없는 선에서 외국자본의 국내 산업 침투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영어사용의 용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영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내교육의 실시를 확대하고, 모든 금융관련 법령의 영문화를 조속히 완결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영어 사용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에 영어조기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환경을 점진적으로 바꾸어나가야 함.
-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국내 금융산업이 경쟁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문을 집중 육성해야 함.
- 특히 자산운용산업의 육성을 위해 금융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여 투자자가 용이하게 저비용으로 위험과 기대이익 수준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시장의 유연성과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이를 위해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도입을 적극 확대하고 증권선물거래소에 다양한 인덱스 펀드의 추가상장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금융허브 비전을 국가의 주요 목표로 선정하여 추진주체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야 함.
- 금융허브의 추진은 범부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어 부처간 공동목표를 향한 유기적인 연계 노력이 중요함.
- 금융허브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나 투자유치와 같이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나 생활환경 및 클러스터 조성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